

사설

‘장묘정책’ 뒷걸음질 하나

최근 몇 차례 실시한 장묘제도에 관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화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했던 가족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과, 57.7%의 시민들이 화장에 찬성한다. 94년의 46.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실제 화장한 한 비율도 95년 28.6%에 머물렀으나 99년 43%로 경승 뛰었다. 올해는 절반을 넘어선 54.3%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실시한 ‘장묘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식 조사’ 결과, 화장 찬성률은 59.1%, 납골당 또는 납골묘 선호도는 33.4%였다.

화장과 납골당(묘) 안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여러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했다. 이것보다 더 큰 원인은 매장을 원해도 묻힐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묘지 수는 2000만기로 서울시 면적의 1.6배, 우리나라 전체 공장 면적의 3배나 된다. 묘지 1기당 평균 면적은 19평, 1인당 주거공간이 4평인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5배나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화장과 납골당(묘)이 죽은 사람이 국토를 잠식하는 현상을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화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납골당(묘)의 수요도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함을 떨칠 수 없다. 시행령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종교단체가 납골 시설을 건설할 경우 1개 시설 이상 지어서는 안되고, 면적은 30평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을 결여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0평이면 120구밖에 수용할 수 없다. 적은 사할이라도 1천 가구 정도의 신도들이 있는데, 신도들을 위해 납골당(묘)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할의 경우, 시행령대로 한다면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납골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사할 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해 면적 제한 조항 등을 없애고, 사할의 형편에 따라 납골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名山 케이블카’는 안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제주도 당국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도 당국은 한라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은 어떤 변명으로도 케이블카 설치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결국은 유서깊은 제주도 문화의 뿌리와,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태계의 보고인 한라산의 환경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측의 입장에는 각각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를 들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에 대하여 가져야 할 중요한 근본 태도가 있다. 자연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지금의 잘못된 자연 관리의 방식에 의하여 훼손되는 한라산 환경을 주어진 현실로 놓고, 케이블카 설치가 어느 정도 한라산 자연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 설정된 조건을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을 낸 것이 된다. 지금의 제주도 관광자원 개발 양태와 환경보호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근본적으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가운데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잘못된 지금의 양태를 임시 방편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명분 아래 더 큰 만행을 저지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근본적인 시책을 마련할 때 오히려 한라산의 귀한 가치가 제대로 살아날 것이며, 고급의 관광자원으로 승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 지역으로 지목된 구역은 불교 남방전래 설 근거지로 문화적 유래가 깊은 곳이며,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무슨 명분으로든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과 파괴의 대 표적 사례로 두고두고 지목될 만행이 될 것이 분명하다.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단지 한라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러 명산들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 케이블카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한다. 이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또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싸구려로 우리 자연을 포장하여 파는 그러한 지금 관광은 하루 빨리 지양해야 마땅하다.

청년불교 활성화 ‘파란불’

조계종포교원, 대불련·대불청 예산 최고 4배 증액 지원

네트워크 구축...교육·조직 재정비 기대

대학·청년불교 포교에 파란 불이 켜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내년 계층포교 활성화 대상으로 대학·청년불교계를 선정하고,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한 청년불교 활성화 및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교원은 예산개요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본지 295호 1면 참조)와 포교연구실 지역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러 계층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곳이 청년불교인 만큼, 내년도 계층포교의 집중점을 청년불교 활성화로 잡고 집중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님도 총무원회의를 통해 “청년불교는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불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 포교를 위해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라”고 당부한바 있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올해 2천1백만 원보다 9,300만원을 증액한 1억1,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원예산은 4배가 증액된 것이다.

대불련은 이 같은 예산증액에 따라 학내포교 활성화, 정보통신 장비, 지역활동력 강화를 정책방

향으로 잡고 전국 지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불교청년회는 올해 1천300만원보다 약 1,120만원(84%) 증액된 2천400만원이 지원된다. 대불청은 내실있는 조직으로 재도약 한다는 방침 아래 조직과 교육, 사회포교활동을 실천과제로 삼고, 전국조직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불교 청년지도자 개발교육’을 비롯해 전국조직 재정비를 위한 각 지부 홈페이지 구축 활성화, 부다피아 청년공동체 건설을 위한 밀알결사 사업을 펼친다.

포교원의 청년불교에 대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편성은 중앙승가대 김포화사 이전과 관련하여 내년도 포교원 예산이 동결된 상태(실제 6천만원 삭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포교원 황찬익 과장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대불련과 대불청에 대한 집중지원과 현장감있는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포교원 차원에서 내년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청년불교에 대한 예산확충 등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청년포교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조계종 새해예산

261억9천만원

조계종 중앙총회는 5일 149회 임시중앙총회를 열어 261억9525만원(일반회계 157억3600만원, 특별회계 104억5925만원)의 새해 중앙총무기안 예산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작의원 78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개최한 이날 총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규모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에 비해 0.2%포인트(2490만원) 줄었다. 특별회계 가운데 시설특별회계와 신도교육특별회계도 각각 39.5%포인트, 77.3%포인트 줄었으며, 다만 중앙승가대이전 특별회계만 30.2%포인트 증가했다.

세출부에서 각 부서가 동결 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사회부의 경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1억5000만원 △사회환경보존 사업 3700만원 △불교사회단체 육성 4800만원 △사회복지재단 사업비 및 기금적립금 4억8000만원 등 올해 대비 15.8% 증액됐다.

예산안 승인에 앞서 총회는 △법제분과위원회에 근일스님 선출을 △기초선인 운영위원회에 현 스님 선출을 △승려로관리법을 개정했다. 또 정부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방송광고시장의 완전자유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종연 총무원장 27일 취임

총무원윤 교무·학현 재무·법선 규할·수보스님 임명

지난 11월 23일 선출된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종연스님의 취임 법회가 27일 오전 11시 성북구 태고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한편 종연스님은 7일 총무원장에 임윤(부천 보리정사) 교무부장에 학현(남양주 선덕사), 재무부장에 법선(강남 불국사), 규할부장에 수보(제주 광명사)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윤스님:1945년생, 62년 현공신은사로 득도, 65년 추당 스님에게 비구계, 66년 법주사 강인 수료, 태고종 교무부장, 총무원원 등 역임.

△학현스님:1944년생, 62년 인공스님 은사로 득도, 백양사강인 대교과 수료, 태고종 경기동부교구총무원장 역임, 현재 법규위원회 위원.

△법선스님:1943년생, 62년 종공스님 은사로 득도, 태고종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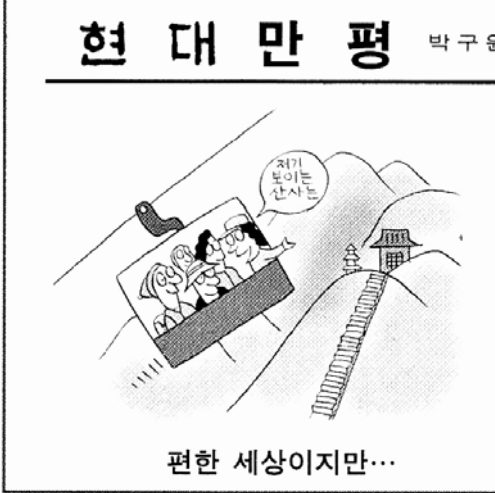
△임윤스님 △학현스님 △법선스님 △수보스님

한국의 불교법 른종 2세종정을 역임한 혜연 당 일화스님이 3일 오전 7시 30분 공주 원효사에서 원직에 들었다. 법랍 60세, 세수 74세. 스님은 “맑고 흐림 분바탕이 차분한 하나인데/밟다 굽다 좋고 나쁜 굴이 따져 무엇이라/나고죽고 하는 것이 본래면목 아닌지라/분별심을 다 여의면 일체경계 통하리라”는 열반송을 낭송했다.

일화스님은 1927년 충남 공주 생으로, 40년 마곡사에서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44년 마곡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90년 한국 불교 법륜종을 창종하고 초대 총무원장, 95년 법륜종 2세 종정을 지냈으며 지난 7월 원로원 원로위원으로 위촉됐다.

일화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7일 오후 1시 공주 원효사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이경숙 기자



편한 세상이지만...

국방부 선도책자 재발간

문제 책 폐기...종편위 관련자 문책요구

국방부는 군정병 선도 책자인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 백과>가 기독교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용을 전면 수정해 재발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종편위는 △국방부장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조만간 국방부에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문해 위원장 양산스님에게 불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책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12월 중에 편집

‘종교편향’ 영주 6개 사립교 경고

경북도교육청...각서도 받아

종교편향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경고조치령 행정지도에 나섰다.

도승회 경상북도 교육감은 11월 28일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에 특정종교교육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4일 경북도교육청에 6개 학교 교장을 불러 정규 수업시간에 예배를 보

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도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종교과목을 선택할 경우 종교 외 과목을 제시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정규수업 시간의 종교교육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주시실천승려회 사무총장 도기스님은 “종교교육 법규의 법적조항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인도 · 미얀마 · 스리랑카 · 파키스탄

성원해 주시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크로드 여행사의 출발 가능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p>인도청지 15일 1월5일 출발, 265만</p> <p>서울-봄베이-아잔타·엘로라석굴-산치대탑-카쥬라호 조각사원 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나란다-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히말라야영봉-카투만두-서울</p>	<p>미얀마청지 6일 1월10일 출발, 165만</p> <p>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몽유아-밍군-양곤-서울</p>	<p>스리랑카 6일 2월9일 출발, 135만</p> <p>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아-담불라-캔디-콜롬보-서울</p>	<p>파키스탄 간다라 불교미술 8일 2월9일 출발, 195만</p> <p>서울-라호르-탁실라-이슬라바마드-스왓트-타티바하-페샤와르-라호르 (부처님 고행상이 있는 라호르 박물관)-서울</p>
---	---	--	--

완벽한 일정!! 철저한 준비!! 정성어린 안내!! 실크로드는 최선을 다해 모실 것 입니다.

주) 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빌딩 505호 (02) 720-9600 (FAX) 734-9937

대표이사 이상원 · 부장 이상일 · 차장 이기만 · 과장 김선겸 · 과장 최영아 · 대리 박미영 합장